자유통일 · 자유민주주의 · 세계시장
뉴데일리 미디어그룹이 뛉니다
뉴데일리 · 뉴데일리경제 · 시장경제신문

시장경제

2011년 9월 7일 창간 안내 02-757-1830 Meconomynews.com 제137호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빅데이터로 보는 진짜 뉴스 진짜 민심
www.bigtanews.co.kr
데이터 저널리즘의 새 지평
빅터뉴스 워드미터

513조 빚더미 예산… "반성 효과 미래 없는 3無 예산"

야당 "'퍼줄리즘'으로 국민 세금만 낭비"
"정부지출 증액보다 경제정책 전환해야"
한국당, 15조원 이상 삭감 방침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반성·효과·미래가 없는 3無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석 의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미래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만드는 비정상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니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하라는 취지다. 양 교수는 "국가 채무의 이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저성장 국면이 지속돼 국가 채무 지급 이자분이 16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26조 4000억원은 앞으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예산안을 반성·효과·미래가 없는 3無 예산안 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자리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예산을 들여다 보면 1조 2000억원을 들여 1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이를 계산해 보니 1인이 1개월당 13만 5000원을 받는 일자리를 14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서 당당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늘어난 예산 중 복지예산에 배당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이 44조원 증가했는데 이 중 21조가 복지 예산에 집중됐고 일자리 예산도 4조 5000억을 차지한다.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 4조 5000억도 복지예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자리 예산이 사실상 이름만 다른 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교수는 일본과 경제 마찰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재·부품·장비와 AI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소재·부품예산을 늘린다고 하루 아침에 기술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공무원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첨단분야는 정부 지출보다 자유와 규제를 푸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증액하기보다 경제 자유 확충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기업 부채 2023년에 447조원… 국가 근간 흔든다"

정부가 단기적 지표에 반응해 경제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현 교수는 "공기업 부채가 2023년에 447조원에 달해 GDP대비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 채무문제는 정권 차원이 아니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임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 확장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부채를 뺀 순 금융자산이 600조 원 정도 된다"며 "순 대외 채권 액수도 5000억 달러에 육박해 국가 채무 비율로 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규모로 보나 재정에 여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채무비율은 올라가지만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지급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책위는 "경제정책 전환 없이 올해보다 43조9천억원 증가한 예산안은 '퍼줄리즘'의 후폭풍이자 국민 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조원 이상은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산안을 ▲ 소득주도성장정책 예산 ▲ 선거용 선심성 예산 ▲ 퍼주기 예산 ▲ 국회심의불복 예산 ▲ 재정 문란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상임위별로 총 100개 사업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meconomynews.com

"공수처 반대·문재인 하야"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지난 25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제3차 투쟁대회'를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와 문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 기도회를 이어갔다. 사진은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는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정상윤 기자

60대 이상만 늘어난 '웃픈' 일자리

한참 일할 3040·제조업 휘청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가량 늘면서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같은 달 실업자 수도 8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집안을 책임지는 30 · 40대 취업자 수는 24개월째 감소했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고급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마이너스 행진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40만4천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만8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만 38만명이 늘면서 다른 세대를 압도했다.

고령층의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것은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며 "이는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가족을 책임지며 한참 일할 나이인 30·40대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1년 전보다 40대는 17만9천명, 30대에서 1만3천명 각각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4개월째 동반 감소하는 모습이다.

반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줄었다. 일자리의 질에서도 양질로 취급되는 산업과 금융분야 취업자는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1000명(-2.5%) 감소한 44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 기록을 갱신중이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4만3000명(-5%) 감소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천명) 등은 늘었다.

김동욱 기자 east@meconomynews.com

4분기 제조업 전망 '동반하락'… 투자도 '악화일로'

대한상의, BSI 지수 발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72'
기업 3곳 중 2곳 "연초 세운 목표 달성 어려워" 응답

올해 4분기 제조업 체감경기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불안요소들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내수기업들의 경기전망이 지난 분기에 이어 또 다시 동반 하락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

경기전망지수가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세로 수출(10개월째 마이너스)과 영업이익(상장사 상반기 '37%)이 줄어드는 등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원자재값 변동성,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동반 하락했다. 4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5로 직전분기(88)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69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기업들의 실적 목표 달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연초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3곳 중 2곳(62.5%)이 "못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근접하거나 달성 가능'이라는 응답은 35.1%, '초과 달성'은 2.4%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 상황도 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의 투자 추이'에 대한 물음에 '별 차이 없다'(58%)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악화됐다'(31%)는 답변이 '호전됐다'(11%)는 답변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극적 경영(66.5%)',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12.8%)', '국내시장 포화로 인한 투자처 부재'(9.5%) 등을 차례로 꼽았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국 모든 곳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 특히 자동차·부품, 기계 업종이 밀집해 있는 '전북(51)'과 '경남(61)', '대구(61)'의 체감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약(113)'만이 기준치를 상회한 가운데, '철강(65)', '정유·석화(67)', '자동차·부품(69)', 'IT·가전(69)', '기계(73)', '조선·부품(91)' 등 모든 주력제조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책역량의 초점을 우리 힘만으로 바꾸기 어려운 대외 여건에 두기 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내부의 일에 맞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융복합·신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파격적 규제개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45.9%), '파격적 규제개혁(23.5%)', '자금조달 유연화(21.2%)', 'R&D·인력 지원 강화(9.4%)' 등을 꼽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제조업은 우리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4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2030년까지 세계 제조업 4강에 들겠다는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 표한 바 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

Inside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 ▶2면
칸라이언즈 연사 모집 ▶14면

누구나
칸 라이언즈 무대에
설 수 있다.
CANNES LIONS 2020
22 - 26 June 2020
2020 칸 라이언즈 연사 모집안내
자격: 독보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접수: canneslions.com 홈페이지 (2019년 11월 중순까지)
문의: 칸 라이언즈 한국 사무국
(webmaster@canneslions.co.kr, 02-757-1830)